

북한의 ‘남북관계 전면 차단’ 위협 배경과 향후 전망

입 장 태

남북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북한은 지난 10월 16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는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남북관계의 전면 차단’이 의미하는 것은 그동안 당국차원의 대화와 협력에 국한되었던 남북관계의 경색을 전반에 걸쳐 확산시키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기존의 ‘선택적 通美封南(通經封政, 通民封官)’에서 ‘전면적 通美封南’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전면 차단이 의미하는 바는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휴전선을 통과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실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 하에서 시차를 두고 긴장도를 높이는 단계적인 방식과 특정 시점을 기해 특정사업의 중단을 선언하는 방식을 두고 저울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면 차단의 우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개성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의 중단은 외화부족 현상이 심각한 북한으로서는 적지 않은 실리의 포기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북관계의 전면 차단’을 경고(?)하고 나서는 배경과 의도는 무엇일까?

첫째, 북한 당국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체제와 정권의 안보를 강화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 및 사생활 관련 내용이 들어있는 뼈라의 대량 살포가 체제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를 이명박 정부가 방조 내지는 조정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뒤집어 보면, 북한 체제의 취약성이 최근 들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남한 정부에 돌림으로써 북한 내부의 결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남한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이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사회 내부에 남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확산되고 있는 현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한 사회 내부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유도함으로써 정부의 입지를 위축시키겠다는 점도 계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테러지원국 해제를 계기로 대미관계의 개선 가능성과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호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남한에 대한 공세적인 태도를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남한 정부를 압박함으로써 대북정책의 전환 유도과 함께 대남협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과 그에 따른 남북관계의 전망은 어떠한가?

현재의 상황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변화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현 정부는 출범 시기부터 북한의 압박에 끌려 다니는, 소위 ‘저자세’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방안의 모색’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이며,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 역시 대화를 통해서 그 방법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북관계의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빼라 살포에 대해 공식적으로 자제를 요청하거나, 대북 식량 및 비료지원 발표 등의 성의(?)는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이 정도의 조치에 만족하지 못한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경우이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전격적으로 개성공단의 우리측 상주인력을 철수하도록 요구하여 개성공단의 문을 닫도록 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 더구나 개성공단은 김정일의 ‘교시사업’이기도 하고, 개성관광까지 포함해서 연간 4천만달러 이상의 순이익이 나기 때문이다.

다만 필요할 경우 북한은 점진적으로 압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북한은 개성공단 관광의 중단, 개성공단 출입을 위한 통과 회수의 축소, 불필요한 인원의 방문 제한 및 상주인력의 최소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받게 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 행사한 ‘벼랑끝 전술’ 행태로 보아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철수를 요구하거나 군사적으로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